

# 베트남 경제 개혁의 경험: 북한 경제 부흥에의 시사점

田辺輝行 / 前 ERINA조사연구부 객원연구원

## 머리말

**도** 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면, 한반도와 베트남은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중국과 인접하고 바다에 면해서 남북으로 길고, 남북을 합한 면적은 베트남보다 다소 크지만 인구는 모두 7,000만 명 전후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더욱 중요한 유사점은 제2차세계대전후 함께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측이 공산주의권, 남측이 민주주의권에 속했다는 것이다. 그후 역사는 다소 달라져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채로 있는 한편, 베트남은 1975년에 사실상 남북 통일을 이루었다. 또한 베트남은 도이모이(개혁 정책)라는 시장 경제화 정책을 도입하여 예전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남한이 OECD에 가입할 정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그 이유

는 중앙 계획형 또는 폐쇄적 경제체제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베트남 경제 개혁의 경험을 통하여 북한이 경제 부흥을 시도하는 경우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 베트남의 경제 부흥 과정

베트남 경제 부흥·시장 경제화의 과정은 대략 다음의 4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즉, 첫째는 1985년 이전의 도이모이의 요람·준비기, 둘째는 1986~90년의 도이모이의 기반 정비기, 셋째는 1991~95년의 도이모이 결실기, 넷째는 1996~2000년의 도이모이 조정기이다.

1975년의 전쟁 종결후 베트남은 북측의 주도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국가의 통일과 남쪽 경제의 사회주의화가 시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쪽 사람들에 의한 남쪽 사람들의 재산 몰수, 남쪽 사람들의 수용소 보내기, 실정에 맞지 않는 농업의 집단화 등도 수반되었기 때문에, 보트피플이라 일컫는 난민

을 대량으로 발생시켰고, 쌀이나 고무 등 상품 작물의 수출로 번영했던 남쪽 경제는 한꺼번에 파멸되었다. 거기에 1978년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야기된 1979년의 越中전쟁의 전비 부담이 타격을 주어, 80년대 초에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마침 구소련의 글라즈노스트가 주창되고 있는 가운데, 1986년 도이모이 즉, 시장 경제화 정책이 채택되었다. 여기에 도달한 시기를 '도이모이의 요람·준비기'라 할 수 있다.

도이모이 정책의 채택이 결정된 시기인 1986년부터 5년간은 '도이모이 기반 정비기'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가격 자유화, 각종 보조금 폐지, 환율 절하, 세제 개혁, 국영 은행의 정리·통합, 외자법 제정 등 시장 경제화를 향한 제도 개혁이 중단없이 빨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율은 수백 퍼센트(%)에 달했고, 새롭게 제정된 법제도간의 정합성이 이루어지 않아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조령모개로 경제 혼란은 극에 달했다. 게다가 1989년 캄보디아에서의 철병에 따른 100만 병력의 반수 삭감, 베를린장벽 붕괴에 의한 채무 상환 문제, 구사회주의권에 파견되었던 대량의 베트남 노동자의 귀국에 의한 실업 대책 등이 정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한 가운데 1991년 구소련연방의 붕괴로 베트남에 대한 원조도 중지되었고 기술자도 귀환하게 되어, 드디어 도이모이는 막다른 곳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부터 5년간의 시장 경제화 노력과 IMF나 세계은행, 그리고 일본을 위시한 자유주의권 국가들 원조 제공의 전제조건이 된 캄보디아 화평 노력이 결실을 맺어, 도이모이 정책은 큰 성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1991년 캄보디아 화평 실현후, IMF와의 사이에 확대구조조정퍼실리티(ESAF) 제공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것을 수용하여 1993년에는 공적 채무 순연, 속칭 파리클럽 합의를 성립시켰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최대의 원조국인 일본도 1992년에 국제수지 지원을 위한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 침공 이후 정지되었던 對베트남 원조를 재개하였으며, 1993년에는 세계은행 주최로 제1회 對베트남원조국회의가 개최되어 20억 달러 가까운 원조 약속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다른 한편, 해외로부터의 민간 투자는 공적 원조보다 빨리 시작되어 인가액 기준으로 1995년에는 연간 65억 달러에 달했다. 당시의 GDP가 대략적으로 200억 달러 전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991~95년의 '도이모이 결실기'의 GDP 성장률은 평균 8% 이상에 달해, 1980년 후반에 수백 퍼센트에 달했던 인플레이율도 1995년에는 10%대, 그 다음 해에는 한자리수까지 떨어졌다. 또한 수출액도 증가하여 80년대 후반에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 1995년에는 53억 달러, 최근에는 100

억 달러대로 근접하는 등, 이 기간에 위기적 경제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급성장을 이룩했다.

최근은 '도이모이 조정기'에 들어서인지 잠시 정체되어 있는 감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이모이 결실기'의 성장은 회복(recovery)의 색채가 강했다고 할 수 있으며, 게다가 그것이 이미 존재했던 유희 인프라의 이용도 제고에 힘입은 바 컸기 때문에, 이 기간의 투자 효율은 비교적 양호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기존 시설로는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빠르고 높은 수익률(quick and big return)의 투자 기회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고성장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거기에 주변 아시아 제국의 경제 위기가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시장 경제화 정책이 실시되어 농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이 '활성화'되었고, 거시 경제의 균형(balance)도 달성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필요한 시책 가운데서도 금융 개혁과 국영 기업 개혁이 아직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베트남의 국내 저축률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고 고성장을 지속 가능케 할 만큼의 기반도 아직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자 의존의 고성장 정책의 한계를 보여왔다. 그리고 구소련의 루블 환

율 평가 문제도 있고 통계 상으로 대외 부채 총액이 수출 총액의 20 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출이 급속히 신장되어 그 총액이 대외 채무 총액을 상회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플레도 수습되고 베트남 통화의 환율도 주변 국가보다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과제가 많은 '조정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도이모이 정책은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 관건이 된 정책

이제까지의 도이모이 정책을 되돌아보면, 그 정책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첫째는 생산 회복이고, 둘째는 생산 회복 실현에 불가결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이고, 셋째는 생산 회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시경제 불균형의 해소와 경제 안정화이며, 넷째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이다.

베트남은 농촌 인구가 80%를 점하는 농업국으로서 생산 회복은 한마디로 농업 생산 회복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생산 의욕을 잃었던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 불가결하였다. 이를 위해 농산물 청부 방식의 도입(1981년 청부액을 초과하는 생산물에 대한 농민 소유를 허용), 가격의 자유화(1987년), 유통 자유화와 수출의 해금(1988년), 농용지법의 제정(1993년 토지 사용권의

전매·상속을 허용)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일련의 개혁 결과, 식료품 부족에서 일전하여 세계 유수의 쌀 수출국이 되었고, 커피·후추 등의 환금 작물의 수출도 급속히 신장되어, 농업 부문은 유력한 외화 획득원이 되었다. 요컨대, 가족 경영의 부활, 사실 상의 토지 소유권의 부여, 가격·유통의 자유화는 단순히 생산의 회복에 끝나지 않고, 경제 발전 원동력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3차 산업에서의 생산 주체였던 국영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경영자주권의 부여(1987년), 정부의 보조금 폐지·가격 자유화(1989년), 채산성 악화 기업의 정리·통합 등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주식회사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다. 국영 기업의 개혁은 그 자체와 그 성과의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우선 기업의 정리·통합을 보면, 1992년에 1만 5,000社였던 것이 그 다음해 말에는 6,000社 정도로 격감하였다. 삭감된 기업의 다수는 영세한 상업과 농업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국영 기업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엄밀히 따져서 국영일 필요가 없는 기업이 삭감되었고, 채산성있는 기업과 사업 부문은 가족이나 개인 경영으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된다.

경영자주권을 얻었지만 보조금이 폐지된 국영 기업의 그후의 궤적을 보면, 운수·무역·부동산 등의 서비스나 식품·음료 등의

소비재 생산 분야에서는 그동안 얻었던 지위나 특권의 충분한 활용과 외자와의 제휴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있다. 봉제·제화업 등에서는 위탁 가공 수출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는 기업도 있다. 또 농산품·어개류의 가공업도 수출 기회가 많아 일반적으로 성적은 나쁘지 않다. 문제는 구식이거나 대규모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공업 부문이다. 그런데도 기계 제조 분야에서 현존 설비는 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외자와 합작 사업을 일으켜 경쟁력있는 생산 설비를 신설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구식 설비로 취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과거 적자 누적에 의한 채무 상황 목표가 서 있지 않아서 신규 투자도 할 수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이들이 금융 기관의 불량 채권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 불량 채권이 금융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재정 금융 분야에서는 소위 IMF·세계은행이 통상 추진 장려하는 정책 패키지가 그대로 실시되어, 실시 속도는 차치하고 안정된 거시 균형 달성 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 기술한 바와 같이, 80년대 후반에는 가격 자유화와 국영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단행하는 한편, 90년대에 들어서도 영업이윤세·개인소득세·천연자원세·농지사용세 도입이나 수출입세법의 개정 등이 중단없이 빠르게 이루어

졌다. 그 결과, 1987년에는 소위 국영 기업으로부터의 상납금이 세수의 약 80%를 점했던 것이 1993년에는 30~40% 정도까지 감소되는 한편, 세입의 對GNP 비중은 1991년의 14%에서 1993년에는 24%로 상승하는 등 세입 구조의 변환과 세입 기반의 강화가 동시에 달성되었다.

금융 면에서는 화폐 공급 관리의 적정화를 꾀하면서 금융의 기능과 제도의 창설·정비가 이루어졌다. 우선 1988년에 중앙은행인 국가은행을 지폐 발권·통화 공급 관리·금융 기관의 감독에 전념시키는 한편, 그때까지 유지되고 있던 상업·투자 은행적 업무를 외국 무역·개발·농업·상공의 국영 4개 은행으로 이관시켰다. 또한 이들 국영 이외의 주식 은행·외자와의 합작 은행·외국 은행의 지점 영업을 인정하였고, 지방·농촌 부문에 대해서도 농촌 금융이나 저소득층의 지원 대책으로서 인민신용기금이나 貧者은행 등의 설립·진흥이 시도되었다. 게다가 1994년에는 은행간 거래 시장(콜 시장)과 은행간 외국환 시장이 창설되었고, 최근에는 증권 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 환율에 대해서도 실세에 맞게 계속적으로 절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재정 적자는 1985년에 GDP의 10%를 초과했던 것이 1992년 1.7%까지 저하되었다. 통화 공급량(money supply)의 증가율도 80년대 후반은 수백 퍼센트에 달했던 것이 1992년 이후는

30% 전후로 떨어졌다. 환율의 급속한 하락도 1991년 이후 1 달러에 약 1만 1,000 베트남 돈의 수준으로 안정되고, 그 결과 격심했던 인플레이션도 급속히 수습되어 90년대 중반에는 한자리 수까지 떨어졌다.

외국 무역 면에서는 1993년부터 1995년에 걸쳐 수출입쿼터제도와 수입허가제도가 크게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입을 합쳐서 100 품목이나 되었던 쿼터 대상 품목이 수출은 쌀과 섬유 제품의 2 품목만, 수입은 7 품목만으로 되었고,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보고 의무가 부과될 뿐 허가 취득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특정의 주요 품목 거래가 특정 국영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기타 품목에서는 민영의 무역 전문 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외국 투자의 수용은 1987년의 외자법 제정에 의해 그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 석유·가스·호텔이나 외국인용 주택 건설·서비스업부터 시작되어 서서히 공업 단지나 제조업 분야로도 넓혀져갔다. 1995년의 투자액은 인허가액 기준으로 60억 달러 이상에 달했고, 실행액 기준으로는 1995년에 2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는 베트남 경제 규모(1995년의 GDP는 200억 달러 내외)로 보아 상당히 큰 액수였다.

많은 액수의 연체를 일으키고 있던 대외

채무에 대해서는 1993년의 파리클럽에서 구 사회주의권 이외의 공적 채무에 대한 순연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후 민간 채무에 대해서도 런던클럽에서 순연·삭감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사회주의권에서는 러시아와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많은 구동구 제국과의 사이에서 채무 상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그 결과, 연체되고 있던 채무의 상황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됨과 더불어 할부상환금(debt service) 비율이 한자리 수의 건전한 수치가 되어 대외 채무 상황 능력의 우려도 불식되었다. 그러나 상환 조건이 엄격한 상업 차관 차입이나 이에 대한 정부나 중앙은행의 채무 보증은 엄격히 제한되어, 대외 차입의 대부분은 장기 저리의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의 차입으로 조달되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대부분은 수익성이 높아 민간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통신 분야 등을 제외시키고, 전력·도로·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과 농촌·지방의 진흥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 북한의 경제 부흥 시나리오

이제 베트남에서 북한으로 눈을 돌려보자. 북한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 개혁 착수 전의 베트남과 일견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선 만일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대외 개방·시장 경제화형의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경제 부흥을 추구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무리인 줄 알면서도 설정해보았다. 다음으로 그 시나리오를 案으로 하여 베트남의 경험을 참고로 하면서 향후의 검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북한이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 하에서 베트남형의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한다면, 그 정책은 베트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제도적인 것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① 부흥을 위한 긴급 대책을 포함한 '생산 회복을 위한 조치', ② 이의 실현에 불가결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③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의 거시 불균형의 해소·경제 안정화, ④ 산업 개발·인프라 정비를 포함하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의 이룩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긴급 대책으로서 극도로 부족한 물자의 수입이 있다. 필요한 물자로서는 우선 인도적인 관점에서의 식료품과 의약품, 농업 생산의 회복·유지를 위한 비료·농약, 물자의 수송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화석 연료, 기존 시설의 복구에 필요한 자재·부품·기계 및 생산 유지에 필요한 중간재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생산의 회복과 중기적으로 생산의 증가를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의 자유화, 농가로의 가족 경영과 토지사용권의 보증, 가족 경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서의 농업공동조합이나 농업신용과 같은 시스템 정비를 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단일 경작과 밀식 등에 의해 피폐된 토양의 개량과 함께, 삼림 보호를 포함하여 홍수 방지를 위한 치수와 관개 시설의 복구·정비 같은 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산업 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전력공급체제의 안정화도 도모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발전 설비 능력은 7,000~8,000 MW 정도라고 하는데, 만일 이것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으면 당면 수요에는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방문자의 정전 체험이나 기타 구사화주의권의 예를 보면, 특히 화력발전소는 설비 노후화는 물론이거니와 애초부터의 설비 불량때문에 공칭 능력의 50%도 발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발전소 건설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빠르면 2007년 이후로 아직 먼 일이다. 따라서 우선 근년의 수해로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를 포함한 기존 발전소의 실질 출력 복구 가능성을 조속히 평가하여, 가능한 것부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른 발전소의 신설·긴급 대책으로서는 공기가 짧은 가스터빈이나 발전 바지(barge)의 도입,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또는 중국과의 송전선 연결에 의한 전력 수입 등의 발전 계획 책정과 그 실시가 요구된다.

더욱이 전력 공급 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송배전망이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국방 상의 관점에서 주요 간선이 땅속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누전도 많아 중간 단계의 송전 손실률이 매우 큰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송전 손실의 축소는 일반적으로 발전소 건설보다도 비용이 저렴하고, 투자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조기에 착수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KEDO가 건설한 2,000 MW의 원자력발전소 운전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된 전력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물리적 시설 외에 전력 요금의 재편·독립채산제의 도입·주식회사화로의 준비 등 제도 측면의 개선책도 필요 불가결할 것이다.

항만에 대해서는 남포·청진·원산 등 그 나름대로의 규모를 갖춘 항구가 있어, 당장 대규모의 기반 시설 확장은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오히려 확실히 일어날 컨테이너 급증에의 대책, 하역의 합리화, 육상 부문과 일관된 체계적 수송 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세의 효율성·투명성·청결성의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운용에 대해서는 제3섹터화·민영화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항은 우선 기존의 평양·원산·청진 공항의 항공 보안 관계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

상의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후 수송량 증가에 따른 대형기 도입을 위한 활주로 연장 공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부 원격지 일부에는 접근 시설(access) 개선을 위해 소형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할 것이다.

육상 수송에서는 철도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긴급 대책으로서 연료의 확보, 기관차·화차의 수리, 이에 필요한 부품·기자재의 공급 등에 의한 수송 능력 회복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다만, 철도 부문의 확대 투자에 대해서는 도로 부문과의 균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발전 부문과 마찬가지로 요금 수준과 요금체계의 재구축·상업화·독립채산 등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 간선 국도에 대해서는 평양과 개성 간에는 그 나름대로의 훌륭한 도로가 있지만, 원산간에는 포장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먼저 이 구간의 개량이 필요하며, 거기에서 북상해서 청진 경유 나진·선봉까지의 구간도 개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 주변은 해안까지 산이 막혀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량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현 도로의 포장 개량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도로 폭을 확장하거나 직선 도로로 개선해나가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평양과 신의주 사이일 것

이다. 시간이 걸리지만, 병행해서 지방 도로는 地道로 계속 개량해가는 것도 중요하다. 농촌 진흥에는 농산품의 시장 접근로와 농업 투입재에의 접근로 확보가 극히 중요하고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 도로의 개량이 필요 불가결하다. 게다가 그 개량 공사가 농촌의 노동력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고용 창출이나 현금 수입 증가로 농촌 진흥에 공헌할 수 있다. 또한 도로 정비에는 통행료의 징수나 휘발유세 등의 일부를 도로 정비로의 특정 재원화하는 등의 안정된 재원 확보와, 정부의 직영 공사부터 계약자 단위로 서서히 이행하여 건설 관계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특히 국제 통신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비에는 외자 협력을 얻는 것이 유리한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유선 회선 정비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단기간에 정비 가능한 휴대전화망의 정비도 병행해야 하며, 여기에도 외자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국영 기업 대책, 재정 금융 정책, 무역 부문 및 대외 채무 등의 취급과 관련된 것은 앞에서 언급된 베트남 시책 대부분의 재탕이 될 것이다. 즉, 국영 기업 개혁 일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경영자주권의 부여, 가격 자유화, 보조금 폐지, 불채산 기업의 정리 통합, 불량 채권 정리, 주식회사화 등을 시도하면서, 위탁 가공에 의한 수출, 공업단지를 포



합한 외자의 유치, 외자와의 합작에 의한 설비 신설 등, 개별 기업의 살아남기를 시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재정 금융 면에서는 가격 자유화, 보조금 삭감, 국영 기업으로부터의 상납금에서 일반 징수로 전환·增收, 상업은행 기능과 금융 시장 정비, 환율 절하를 도모하고, 이들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와 재정 적자 및 통화량 공급의 필요 이상의 확대를 가능한 한 억제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로 수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 면에서도 양적 관리와 무역 종사 기업의 제한을 완화하고, 대외 채무 상환 순연 교섭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고 신규 차입을 가능케 하며,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장기 저리의 자금을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환 조건이 엄격한 상업 차관의 차입은 그 보증도 포함해서 수출액이 충분히 증가되기까지 엄격하게 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북한 부흥의 제약 요인과 베트남 경험의 시사점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 개혁 정책 도입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종 의문이 생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그 재원의 확보와 북한의 시장 경제 수용 가능성, 그리고 만일 수용시 개혁 속도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출력 1,000 MW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거

나, 평양과 나진간의 도로를 정비하거나, 만일 경제가 활성화되어 현재의 선봉과 신의주에 있는 석유 정제 시설외에 새로운 정제소를 건설할 경우에는 수십억 달러 정도의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북한의 1인당 GDP는 500 달러 전후이고, 인구는 2,000만 명이 넘고, 전체 GDP 총액은 1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이며, 수출 총액도 10억 달러 전후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경제 규모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자기 부담으로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자금을 해외에서 차입해도 현 수출액으로는 그 상환 기초 자금을 확보하기가 요원하다. 지금까지의 미상환 채무 총액이 100억 달러 전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이나 공업 부문 등에는 자금이 아닌 민간 직접 투자에 의한 자금 동원이 가능하지만, 인프라 부문의 대부분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장기 저리 자문에 크게 의존해야만 할 형편이다. 또 한편에서는 채무 순연 교섭을 하여 연간 채무 상환액을 가능한 한 적게 하면서 수출 증가에 노력하여, 상환 가능한 차입액 범위 내에서 투자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통상 공적 채무 순연 교섭, 속칭 파리클럽 개최는 IMF와의 경제 정책 관련 합의가 필요하며, IMF가 요구하는 정책 패키지는 철저한 시장 경제화이다. 최근 북한이 이들 국제 기관의 가맹에 의욕을 보이고 있

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가맹하기에는 우선 일정한 경제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게다가 가맹이 실현되어도 IMF와의 사이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입장에서 베트남 경제 개혁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급격한 개혁, 소위 '충격 요법'은 아니고 시간을 들인 '점진주의'이다. 그때문에 국제 기관으로부터 그 개혁 속도가 지체됨을 계속 지적당했다. 사실 그 개혁의 지체가 아시아 경제 위기 속에서 향후 성장 지속에 의문을 표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의 한 시기를 제외하고, 그다지 큰 변동을 수반하지 않고 개혁을 계속하고 있어, 일정의 성과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베트남은 인플레이션, 안정적인 통화량 공급, 재정 적자의 삭감 등을 통해 그 나름대로의 고성장 실현과 수출 급증이란 경제적 성과를 거둬으로써 대외 채무 상환 걱정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점진주의'가 그 나름대로 잘 이루어진 이유는 농업국이었던 점과 '정치적 유연한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부 베트남은 원래 쌀과 기타 농산물의 아시아 유수의 수출국이었다. 그것이 전쟁과 급속한 사회주의에 의해 폐쇄되었지만, 그 폐해를 제거한 후 원상 복귀가 빨랐기 때문에, 경제 부흥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농업 부문이 고성장과

수출 증가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게다가 농촌 인구가 80%이기 때문에, 농업 부문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다른 부문에 다소 문제(예를 들면, 공업 부문의 국영 기업 개혁 지연)가 있어도,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였다.

또한 베트남 공산당은 공산당 독재라는 원칙은 있어도 그 내부에는 비교적 의논의 자유가 있었고, 유력자 사이에 적당한 경쟁 관계가 있어 그 위에서의 합의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문에 당을 결성한 이래 당 내에 유력자는 있어도 독재자는 출현하지 않아, 피의 숙청 등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당 간부의 교체가 이루어져온 '유연한 구조의 정치체제'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어느 의미에서는 일본과 유사하여 의사 결정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합의로 결정된 것은 정치 최고 지도자가 교체되어도 그렇게 가볍게 변경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산당도 뿌리부터의 공산당은 아니고 방편 상의 공산당이였다. 따라서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체제나 독재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또 한 번 합의로 결정된 시장 경제화의 방침은 당 서기장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견지해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북한은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현 체제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형태·속도·정도의 시장 경제화는 다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진·선봉 같은 경

제특구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현 체제에의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 평양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에서 당초 기대한 큰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은 개혁의 꽤 이른 시기에 경제의 중심지인 호치민과 수도 하노이 시내에 외자에 의한 공업 단지를 인가하였다.

또한 북한의 경우 기상 조건도 있고 농업 부분의 역할은 경제 안정을 위해 중요하긴 해도, 경제 성장이나 수출 원동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장과 수출의 원동력을 다른 데서 구해야만 한다. 북한 공업 부분의 규모·고용·도시화율은 베트남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원동력을 공업 부문에서 구하는 사고 방식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 나름대로 공업 부문이 발달해 있었지만, 현재는 노후화되고 구식 기술의 설비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만일 설비의 문제가 없다고 해도 경영·재무·판매·물류·기타 현존 시스템을 발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공업 부문 전체로서의 성장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성장을 고용을 확보하면서 해야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맺음말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는 소위 햇볕 정책 기조 하에, 현실에 입각한 강한 인내로서 북한 문제에 관여해나갈 방침이다. 사실 햇볕 정책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신할 유력한 대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 끝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한편, 북한 자체도 수면 하에서는 국제 기관에의 가맹이나 가능한 범위에서의 시장 경제화를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이 굳게 닫혀져 있던 문을 열고 국제 사회로 복귀하여,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당연시하는 것은 타당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이미 커져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격차가 더욱 더 커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햇볕 정책이 공을 들여서 시장 경제화가 진행된다면 될수록 현 체제가 그 위치를 유연하게 바꿀 수 밖에 없는 한, 내부에 반체제적 기운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햇볕 정책의 시나리오가 어느날 돌연 붕괴 시나리오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경제 면에서는 점진주의에서 충격 요법으로 이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完**